



1세션 “4대 대북 복합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폰

박원근
한동대 교수

■ 북한의 정면돌파 노선

북한은 2019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약칭 ‘정면돌파노선’)을 선언하였다.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포한 것으로 정면돌파를 통해 “미국의 제제봉쇄책동을 돌파탄”내고자 한다.

구체적 수단으로 경제, 군사, 사상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측면에서는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제는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이므로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었다. 군사측면에서는 북한이 유예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표명했으나 해석의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전략무기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사상의 경우 결정서 5항을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강화”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를 1차 기한으로 삼고 정면돌파를 통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도발과 대화의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대선 국면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을 통해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작년 10월 밝힌 ‘발전권과 생존권’의 선 보장을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필요하면 대화에 응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020년 1월 11일 담화를 통해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채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웬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 국내의 상황을 감지하면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고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다만 ICBM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제한,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 부재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년간의 대미 대화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판을 엮고 이전의 강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고 김정은 주변에 합리적인 조언을 할 인물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북한이 금지선을 넘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2019년 1월 신년사와 4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규정한 바 있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4월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은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2020년 1월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것 같다”면서 “자중하고있는것이 좋을 것”이라 비난하였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재개하기 전까지 한국과는 어떠한 의미 있는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

로 읽힌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도 판단된다. 작년 말부터 요구한 남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2020년 2월로 기간을 한정한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중국이 대북 관광객 100만명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접경지역에서 머무르는 관광 형태를 탈피하여 금강산과 원산·갈마를 잇는 내륙 관광을 통해 체류기간을 늘려 외화벌이를 강화하려 한다. 이 경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대폭 감소한다.

■ 한국의 대북정책

철저한 한미의 대북공조가 필요하다. 한미는 북한의 장기전이 2018년 시작된 협상 국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이 판을 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국면으로 단기 이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큰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움직일 방향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불분명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미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공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금지선을 넘을 경우 한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른 바 ‘플랜 B’도 협의해야 한다. 2017년 경험한 ‘화염과 분노’로 대변되는 군사적 긴장 격화는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한미간 필요하다.

중장기 대북정책을 한미가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기 대북정책 없이 단기적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은 북한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수시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핵동결입구, 비핵화 출구’를 제시한 이후 2018년 3월 ‘일괄타결,’ 2018년 4-6월에는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2018년 9.19 이후는 ‘단계적 해법,’ 2019년 3월에는 ‘Good Enough Deal, 조기 수확,’ 2019년 3월 이후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2019년 10월 이후는 ‘대북 선제 상응조치’로 변화하였다. 한미는 비핵화 정의, 목표, 최종상태, 상응조치 등을 포함한 비핵화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한미가 국제공조를 이끌어야 한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한미는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미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한미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모두 닫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중국과는 오히려 다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 특히 ICBM 발사 시험은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중거리핵전력(INF) 협정 폐기 후 고려중인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명분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 중국이 사활적 이해 침해로 여기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미는 중국의 우려를 활용하여 공조함으로써 북한의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억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요소가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도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비용 대 효과를 우선시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을 상응조치로 북한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도 미국의 책임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여 조건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조기 전환에 동의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는 동맹 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도 원하는 전시작전권을 조건에 면밀히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 결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범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도 쉽게 용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한미의 협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미 정부 당국의 기본 인식, 북한의 요구 등이 결합하여 동맹의 이완 현상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모두 정부 밖 행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수권법을 통해 보여준

미 의회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같이 다양한 세력이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정부 당국의 일방적 조치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 **토론자:** 시부에 치하루_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연세대학교를 수료한 후 미국 남서침례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보스턴 컬리지에서 석사학위,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한동대 Grace School 부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아산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이사, 한국 유엔아카데미임팩트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YTN 프로그램인 '더뉴스'에서 국제이슈를 다루는 '더 넓은 세상'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주요 연구물로는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Strategy: Security Perspective"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2019), "카터의 인권외교와 한미관계 - 충돌, 변형, 조정" (2019),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2018), 공저, "트럼프 행정부 안보·국방전략 분석/전망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2017), 공저,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